

밤만 되면 대형화물차 주차장 여전히 몸살 앓는 광주의 도심



대형 화물차들이 지난 14일 저녁 광주시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에 일렬로 늘어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 도심이 밤만 되면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해 몸살을 앓고 있다. 큰 도로부터 골목까지 곳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압제 화물차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계도처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면서 밤샘 주차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차주에게 과징금 처분이 아닌 계도에 그쳐 사실상 '차주 바자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시에 영업용 화물차 1만 4202대가 등록돼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밤샘주차(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는 화물차는 운수사업자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유계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차고지 대신 광주시 도심 도로변 혹은 주택이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거나 지정차고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에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계수교차로 일대에는 대형 화물차 수십대가 일렬로 늘어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북구 용봉동 용봉지구대 앞 골목도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이 양 측면 차로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고, 광산구 운남동 운남고등학교 앞 대로에도 컨테이너박스를 실은 대형 화물차부터 시내버스까지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북구 동천동 광주천변 인근은 주택가까지 대형 화물차가 점령한 상태였는데, 이날 밤 늦게 인근 주택에서 나온 시민이 화물차 사이로 길을 건너려

코로나에 계도 위주 느슨한 단속 골목까지 밤샘 주차로 사고 우려 영업용 화물차 1만4202대 등록 공영차고지는 668면으로 태부족 광주시, 4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지역자치단체의 느슨한 단속에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시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2020년 5510건, 2021년 5048건, 2022년 4709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주차를 하면 일반화물 자동차나 전세버스는 20만원, 개인화물 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5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계도 조치로 끝나 보니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2020년 533건→2021년 796건→2022년 64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별다른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연속 단속 건수가 줄어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당국이 단속 의지가 있긴 한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도 불법 주차장을 양산하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도심에 불법 주차가 만연한 14일 같은 시각,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의 진곡산단 화물공영차고지는 곳곳이 비어 있었다. 실제 주차된 화물차보다 주차 자리를 맡아 두려고 화물차 자리에 주차한 승용차가 더 많이 보였다. 운수업체가 소유한 차고지나 개인 소유의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영차고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광주 시내 화물공영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 화물공영 차고지는 진곡산단 430면, 평동산단 238면 등 총 668면 뿐이다. 그나마도 승용차 주차면을 제외하면 각각 301면, 162면으로 463대의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다. 공영차고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는 다른 차고지의 반 값 수준인 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 현재 수백대가 넘는 영업용 화물차들이 이용 신청하는 등 포화 상태이며, 빈 자리가 나올 때까지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기다린 뒤에야 겨우 주차할 수 있다. 광주시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근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밤샘주차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신고하고 정작 주차는 자기 집 근처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화물차를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고지가 모두 광주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고지 면수가 적다 보니 전남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광주 길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추심 소송

“3자 배상 안돼...직접 받겠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범기업에게 직접 배상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방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 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다. 이번 소송은 미쓰비시측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특허권 2개를 압류해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을 위한

재항소와는 다른 경로의 추심이다. 기존 현금화 결정은 특허권을 현금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번 추심소송의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 이미 대상물이 채권이라는 점에서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기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측의 자산이 존재하면 해당 자산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존재하는 자산으로 없거나 배상금의 전부를 배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 압류 현금화를 거쳐 남은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 법률대리인 측의 설명이다. 법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의 자산으로 배상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추심대상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측 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소송 5년만에 재개

광주지법서 2차 변론기일 열여
간극 좁히지 못하고 장기화 우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해 달라는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소송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16일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배씨 등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자사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다가 이날 5년만에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배씨 등은 이날 공판에서도 “금호고속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단 한대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광주시와 정부도 계획한 내세웠을 뿐 장애인 이동 편의의 제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 측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근거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고, 광주시는 금호고속 분사가 광주에 있지 않아 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로 지목된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반면 이날 정부 측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배씨 등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거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호고속 측 대리인에게 휠체어 탑승객이 이용 가능한 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재무자료 등을 5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무원 되게 해 줄게” 부적절 관계...전남도 공무원 감사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전남도 감사실은 전남도 소속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신분을 인증해야

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A씨와 만났다”면서 “당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여 만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는 공무원 시험생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전남의 한 도의원에게 말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 A씨는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010-2614-9801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읍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보3천, 월수익 380만)